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2023. 1. 27.



국가보훈처

순 서

I. 2022년 주요 성과와 평가	1
II.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2
III.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4
IV. 핵심 추진과제	5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① 영예로운 삶을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5
② 보훈의료·복지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6
③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8
2.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①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9
②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11
③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2
④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13
V. 2023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4

I. 2022년 주요 성과와 평가

□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혁신 기반 마련

- 보훈단체(광복회, 재향군인회 등)와 산하기관(보훈공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 등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
- 새롭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외부 '정책전문가TF(4개분과 45명)'를 구성·운영하여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 추진
 - * 미 보훈병원 수준을 목표로 하는 '보훈의료혁신 권고안' 발표('2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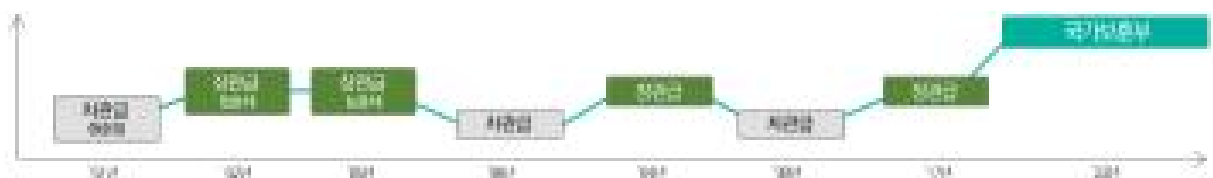
□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웅을 존경하는 문화 조성 노력 지속

- (제도 사각지대 개선)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기초연금 소득산정 개선(복지부 협업),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부담 완화** 등
 - * 광주요양병원 개원('22. 9.) **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22. 10.) 등
- (보훈문화 확산)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수유리 묘역 광복군 17위 현충원 이장, 「제복의 영웅들」 사업 등



□ 보훈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

- (국정과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채택
- (위상제고) 국가유공자들의 염원과 일류보훈의 비전을 담아 부 승격 추진 중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논의중('22. 10.~)



◇ 올해 보훈 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 돌파, 본격적인 업무추진 기반 마련
 ⇒ 2023년을 보훈의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 재도약에 기여

II.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1 보훈 정책 여건

□ 대·내외 환경 : 튼튼한 안보·국가 발전을 위한 보훈의식 부족

- (안보 위협)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우·러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 속에서 군인 등에 대한 신뢰도 부족

* (제7차 세계가치관조사) 군인에 대한 신뢰도 58개국 중 43위

- (사회갈등 격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갈등 관리 역량은 매우 낮은 실정

* ('21. 영국 킹스컬리지) 우리나라가 이념, 빈부, 성별 등 7개 갈등 분야에서 1위

《군인에 대한 신뢰도(제7차 세계가치관조사, %)》



《분야별 갈등 수준('21. 영국 킹스컬리지, %)》



⇒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 더욱 부각

* ('22.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보훈대상 : 정책 수요는 증가, 만족도·자긍심 미흡

- (고령화) 일반 국민보다 빠른 고령화를 겪으며 의료·요양·안장 수요 증가, 마지막까지 국가의 무한책임 완수 필요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5세(6·25참전 90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만족도·자긍심) 보상금 인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하였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자긍심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18.) 63% > ('21.) 51.7%

⇒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 필요

- 국민 :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 증가
 - (공동체 의식 부족) 국민통합의 기반이 되는 국가정체성 등 부족
 - * (제7차 세계가치관조사) “전쟁이 나면 참전하지 않겠다” 59개국 중 14위
 -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 59개국 중 47위
 - (보훈문화 미정착) 국민들은 국가정체성·애국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훈문화가 정착되지는 못했다고 인식
 - * (‘22.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긍정 31.9% < 부정 42.1%
- ⇒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2 일류보훈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보훈체계) 고품질의 일류보훈체계로 질적 도약
 - 국가책임을 다하도록 공정하게 보훈등록·보상제도 개편
 - 저비용·저품질에서 고효율·고품질 구조로 보훈복지 리모델링
- (주체) 국가·지방·기업·국민 등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
 - 국민을 교육 대상에서 보훈문화 조성의 주역으로 전환
 -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범국가적 보훈문화 거버넌스 구현
- (핵심 역할)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동체적 가치 창출
 - 물질적 보상을 넘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존중·기억의 가치 실현에 중점
 - *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 ...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 기본이념으로 한다
- (추진 기반)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걸맞은 위상과 역량 제고
 - 60여년간 행사·집행 위주로 운영된 조직을 정책 중심으로 개편 및 역량 강화, 부처별로 분산된 보훈 기능의 체계화 추진

Ⅲ.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비전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책임
(Responsibility)

존중
(Respect)

기억
(Remembrance)

추진
과제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① 영예로운 삶을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인상
- 생활안정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② 보훈의료·복지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대폭 확충
- 보훈병원을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
-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
- 보훈의료 전문인력 수급 방안 마련

③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신속한 등록 절차 마련
-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유공자 발굴
- 합리적인 등록·심사 기준 정립

2.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①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 조성
- 함께 즐기는 보훈문화 콘텐츠 확산
-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 강화
- 지자체·민간의 보훈문화 동참

②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 안장 접근성 제고 및 사후 예우 강화
- 국립묘지를 문화공간으로 발전

③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디지털 기반 제대군인 지원체계 고도화
- 범국민적인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④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 국제보훈의 외연 확장

추진
기반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비하여 정책 기능과 조직 역량 제고

보훈정책
싱크탱크 창설

+

분산된
보훈 기능 체계화

+

정책 중심
인력구조 개편

IV. 핵심 추진과제

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① 영예로운 삶을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보훈대상자는 고령층*이 많고 저소득자(중위소득 50% 미만) 비율**도 높은 편
* 참전유공자 평균 79세 ** ('21.) 보훈대상자 전체 15.4%, 참전유공자 33.1%
- 국가의 영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훈 안전망” 강화 시급

□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인상

- (보상수준 향상) 과거 5년 평균 인상률(4.3%)보다 높은 5.5% 인상
* 역대 보상금 인상률 : ('22.) 5% / ('21.) 3% / ('20.) 5% / ('19.) 3.5% / ('18.) 5%
- (형평성 제고)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 6·25전몰자녀수당은 대폭 추가 인상하여 균형 있는 보상 구현
* 7급 상이보상금 +9%, 6·25전몰신규승계자녀수당 +20.5%
- (참전수당 개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참전수당 인상에 대한 국가·지자체간 공동목표 설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참전 배우자) 참전유공자 사후, 생활이 곤란한 배우자 지원 방안 검토
- (금융지원) 나라사랑대출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는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 중 유일한 대부 미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폐지)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23. 1.)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시행, 약 3,600여명 추가 수급

② 보훈의료·복지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 보훈·위탁병원이 부족해 일반 병·의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실정
 - * ('21. 실태조사) 주요 이용 의료기관 : 일반 병·의원 64.8% > 보훈·위탁병원 35.2%
- 예산 제약 등으로 품격 있는 의료서비스 지원에 한계
 - * ('18. 실태조사) 위탁병원 이용사유 : "저렴한 의료비" 72.7%, "높은 의료진 수준" 6.4%

□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대폭 확충

- (의료)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하여 토털 케어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 구축
 - 재활센터 : 서울·부산·광주 3개소 → 대전('23. 4.), 대구('24. 9.) 2개소 추가
 - 요양병원 : 서울·광주 2개소 → 부산(180병상, '23.9. 예정)
 - 진료환경 개선 : 치과병원 증축(중앙, '23. 8.), 리모델링(대전, '23. 8.) 등
- (복지) 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증축
 - 수원요양원 증축('22.~'25.) : 설계용역 등 적기 이행
 - * 100병상 규모, 총사업비 197억('23. 23억 : 설계 3, 공사 20)
 - 충북권 건립('23.~) : 부지 선정 및 건립종합계획 마련
 - * 200병상 규모, 총사업비 420억('23. 45억 : 보상 21, 설계 24)

□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

- (민간 공급망 확충) 위탁 의료기관 규모를 현 정부 임기 내 2배 이상으로 확충('21. 518개소→'27. 1,140개소)
 - '23. 100개를 늘리고, 수요가 많은 치과·안과 등 특수진료과 확충
 - 보훈의료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5만여개)을 별도 지정 없이 위탁병원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 * ('23.) 위탁 의료기관 제도 개편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설계

- **(이용 자격 확대)**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단계적 폐지 추진
 -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75세 이상) 폐지('23.), 이후 타 대상으로 이용 자격 확대 지속 추진
 - * 참전·국가유공자법 개정안('22. 12. 발의) 통과 시, 75세 미만 참전·무공 등 약 1.8만명의 위탁병원 이용 자격 발생
- **(준 보훈병원 도입)** 공공병원의 준 보훈병원 지정 도입 추진
 -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은 지정된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 보훈병원을 국내 최고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

- **(특화 진료과 육성)** 보훈병원 전문진료센터에서 노인 질환, 중증 외상, PTSD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한 최고 수준 의료를 제공
 - 외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 **(바이오헬스 선도)** 맞춤형 첨단·정밀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23.~)
- **(의료 협업)** 거점 국립대병원, 군·경찰·소방병원 등 공공병원과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보훈의료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 마련

- **(보훈의료 장학생)** 「(가칭)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 장학생을 선발·지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훈병원 의무 근무
 - * (유사 사례 :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
- **(보상체계)** 우수 의료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성과 평가 등 도입으로 서비스 경쟁 유도
 - *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의료품질·고객만족도 측정 등 평가체계 도입

③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긴 세월이 경과하여 보훈대상자 스스로 공훈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훈대상자는 등록·심사의 공정성·합리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공정하고 합리적 보훈체계를 마련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22. 6. VIP 현충일 추념사) -

□ 신속한 등록 절차 마련

- (장해진단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23. 6.)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50% 단축(평균 2개월 → 1개월)
- (심사기간 단축) 심사 전문인력 활용, 전역 6개월 전 신청 시 전담 심사팀 운영으로 신속하게 심사 처리

□ 합리적인 등록·심사 기준 정립

- (공상추정제)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로 발생한 질병은 공무관련성 추정
-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4개 질환*을 국가유공자인 고엽제 후유증으로 격상
*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 (훈격 재검토)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을 받은 독립유공자 재심사 방안 마련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운영을 통해 방안 검토

□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유공자 발굴

- (독립유공자) 간호사, 외국인, 자금지원 운동가 등 그간 조명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포상 확대
- (참전유공자) 지역별 6·25 주요 전투 참전 미등록자, 외국(UN참전국)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 등 집중 발굴 추진

①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 독립·호국·민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사회의 중심으로 등장, 미래세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훈교육의 역할 시급
-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유공자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 필요

□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 조성

- (호국보훈공원) 용산공원 내에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는 추모 공간으로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추진
 - 호국보훈공원 본격 조성에 앞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호국보훈의 가치가 담긴 상징 조형물 건립
- (낙동강 호국벨트)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마다 상징시설물을 지속 설치, 호국벨트화 사업 확대
 - * ('23.) 故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지원 /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
- (국가보훈광장) 세종 중앙공원 내 보훈의 가치를 담은 광장 조성('23. 4.)

□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 강화

- (탐방활동) 독립운동 발자취를 찾아가는 대규모 국외 사적지 탐방 추진
 - * 학생·교사 포함 300명 목표 / 연해주 지역 중심(안중근, 이상설, 최재형)
- (보훈체험) 청소년 재능기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실천형 보훈봉사 프로그램 확대
 - * ('22.) 8만명 참여 → ('23.) 24만명 참여로 대폭 확대
- (보훈교육) 교사용 「보훈교육 지침서」 개발, 보훈교육 수업안 경진대회*를 통해 활용성 높은 보훈 교과교육 콘텐츠 개발
 - * ('22.) 141팀 참여 → ('23.) 200팀 참여(우수자 해외사적지 탐방 기회 부여)

□ 함께 즐기는 보훈문화 콘텐츠 확산

- (문화콘텐츠)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해 공감대 조성
 - (웹툰·영상) 정전 70주년 관련 휴먼스토리를 엮은 웹툰 제작·배포, 국민이 만드는 숏폼 위주 유튜브 채널 '국민보훈' 개설 등
 - (게임) 모바일 참여형 게임, 보훈 현장 참여형 게임 등 개발·보급
- (AI디지털휴먼) 독립운동가를 AI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하여 활용
 - 각 기념관*에 설치하여 강의·토크쇼·가상체험 등으로 활용, 온라인 상시 접속도 가능하도록 하여 활용도 제고

*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매한윤봉길기념관
- (보훈문화제) 보훈기념일과 연계하여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공연·예술·체육 등을 접목한 국민참여형 보훈문화행사 연중 개최

□ 지자체·민간의 보훈문화 동참 분위기 조성

- (협의체) 지역별 보훈관서-민간 협업을 위한 보훈정책협의체 신설
- (후원·기부) 민간 기업과 단체의 국가유공자 후원·기부 장려
 - 각계각층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돕는 「일류보훈 동행」 프로젝트

* (예시 :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민간 협업으로 전몰·순직유족의 정서적 돌봄 지원
- (일상 속 예우)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자연스러운 예우 문화 형성
 -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각종 기업 제품 구매시 할인 제공 추진
 - 15종의 대상별 보훈등록증을 품격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23. 6.)
- (보훈단체) 보훈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존경받는 단체로 혁신
 - * 수익사업 및 단체 운영 관리 감독 강화, 공정한 선거제도 구현 등

②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 생존 안장대상자는 37만명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력은 9.8만기에 불과
- “묘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낙후된 이미지 등을 탈피, 국민 일상 속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중심 공간으로 발전 필요

□ 안장 접근성 제고 및 사후 예우 강화

- (조성·확충) 연천현충원, 강원호국원 신규 조성과 기존 호국원 확충 등 약 20만기를 추가 조성하여 다가오는 안장 수요에 대비
 - 신규 조성 : 연천현충원(~'25. 5만기), 강원호국원(~'28. 2만기)
 - * ('23.)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설계 / 전남권 국립묘지 기본 구상 추진
 - 기존 묘역 확충 : 영천·이천·임실·괴산·산청호국원(~'24. 13만기)
- (온라인 접근성) 메타버스 국립묘지 구축으로 접근 편의성 제고
 - * ('23.) 메타버스 등 방식의 접근성 강화 / ('24.~) 국립묘지의 단일 플랫폼 구축 추진
- (국가관리묘역) 전국 산재 유공자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확대
 - * ('22.) 12개소 → ('23.) 18개소 / 6개소 추가 지정
- (유해 봉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적극 추진(황기환, 문양목 지사 등)

□ 국립묘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및 국립묘지 테마공간 조성
 - * 급경사 승강장 설치 등 이동 편의 제고, 가로등 상징화 등
- (기념시설) 안장자 유족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방문과 참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시설 건립·재조성
 - 후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23.상)
 - AR·VR기술을 접목한 체험환경 중심으로 전면 리모델링 추진
 - * 대전 보훈미래관, 이천 현충관, 임실 안보전시관, 5·18묘지 기념관 등
- (문화행사) 음악회, 지역축제 연계 체험활동 등 보훈문화 콘텐츠 접목

③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제대군인은 군 인력 구조상 불가피하게 일찍 전역하여 사회복귀 지원 절실
 -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시 평균 연령 38세
- 북한의 위협과 불안한 국제 정세 감안, 제복근무자를 존경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시점
 -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것"(22.6. VIP 현충일 추념사) -

□ 제대군인 전직지원체계를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로 전환

- (AI 기반 시스템) 현 취업지원시스템을 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 구축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각종 정보의 실시간 분석·제공 및 적합 직무 추천, 24시간 365일 챗봇 서비스 등 제공
- (협업)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 고용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데이터 연계 및 공동행사(제대군인주간 등) 개최로 시너지 효과 창출
- (법적 기반 강화) 지원 대상에 의무복무자를 포함하고, 제대군인 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근거 마련(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지원 대상 약 1만명
- (전직지원금)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 기간 확대 단계적 추진
 - * 현재 중기 50, 장기 70만원 / 6개월간 지급(구직급여는 최대 198만원 / 9개월간 지급)

□ 범국민적인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 (공익광고) 감사 메시지를 담은 CF와 웹포스터를 제작하여 TV, 유튜브, SNS, 옥외전광판 등 전방위적으로 송출
- (예능 콘텐츠) TV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 등 협업으로 제복근무자 감사를 주제로 한 특집 기획·편성
- (감사문화제) 매년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날에 '현재의 영웅'인 제복근무자를 위한 감사문화제 개최

4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연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경험 보유
- “자유 수호를 위한 참전의 인연”이 중심이 된 보훈외교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해야 할 시점

□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 (정전 70주년 기념식)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행사로 개최
* (부대 행사) 정부대표단 초청 유엔참전용사 합동 참배, 보훈부 장관회의 등
- (정상회담 연계)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한 미국 현지 참배·위로 행사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 재확인
- (연계 사업)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추모의 의미를 담은 사업 추진
 -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품격 있는 제복 지급(“제복의 영웅들”)
 -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급 인원 확대(’22. 20명 → ’23. 200명)
 - 유엔전적지 자전거 추모 로드(’23. 3.~7.), 참전국 및 국내 유명 유튜버 홍보대사단 운영

□ 국제보훈의 외연 확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 (대상 확대) 6·25전쟁 당시 물자지원국, 타국에 배속되어 참전한 배속국 참전용사 등으로 보훈외교의 대상을 대폭 확대
* (’22. 12.) 프랑스 배속참전국인 모로코 방문, 참전용사 발굴 및 향후 보훈협력 협의
 - 관계국 협의를 거쳐 「유엔참전용사법」 개정 추진(’23.)
- (유엔사·주한미군) 6·25전쟁 참전의 인연을 전후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유지에 기여한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까지 확대
- (글로벌 아카데미) 6·25전쟁에 대한 국내·참전국 학교 공동 수업과정 운영
 - 유엔참전용사 사후에도 미래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계승

V. 2023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22	2023
1-①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신 규> •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추진 •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
	<신 규>	• 대전병원 재활센터 완공('23. 4.) • 중앙병원 치과병원 증축('23. 8.) • 부산병원 요양병원 완공('23. 9.)
1-② 보훈의료·복지 품질 혁신	<신 규> • 위탁병원 640개	•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 위탁병원 연령 제한 75세	• 위탁병원 740개 • 위탁병원 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신 규>	•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가칭)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1-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신 규>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신 규>	• 보훈심사 Fast-Track 전담팀 신설
	<신 규>	• 4개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격상
2-①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정체성 확립	<신 규>	• 용산공원에 보훈상징물 건립
	<신 규>	• 낙동강 방어선 내 호국시설물 건립
	• 보훈체험 8만명 참여	• 보훈체험 참여자 24만명
	<신 규>	• 독립운동가 AI 디지털휴먼 제작
	<신 규>	•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23. 6.)
2-②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신 규>	• 전남권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추진
	• 국가관리묘역 12개소	• 국가관리묘역 18개소
	<신 규>	•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2-③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신 규>	• 제복근무자 공익광고
	<신 규>	• 제복근무자 감사문화행사
	<신 규>	• 「제대군인법」 의무복무자 규정 신설
2-④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신 규>	•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보훈외교 대상국 22개	• 물자지원국, 배속참전국 참전용사 등으로 대상 확대 추진